

'전주역 개선사업' 시민불편 최소화 만전

7월부터 광장 공사 착공으로 자가용 출입 통제... 전주역 후면 임시주차장 조성·복합환승센터 부지 활용 등 추진

전주시가 42년 만에 새 단장을 추진하는 '전주역 개선사업'을 앞두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대책을 내놴다.

전주시는 전주역 개선사업의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공사 기간 중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 처리 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새 단장을 앞둔 전주역은 오는 7월부터 광장 공사가 진행되면, 자가용 출입이 통제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시와 시행기관들은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전주역사 개선사업 홍보물(차량통제 안내문)

가능한 삼거리로 변경돼 차량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과 전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택시는 현재 전주역 주차장 부지에 임시 승강장이 조성해 별도 진입을 허용한

다.

또 자가용의 차량 진입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 전용 진입 구조물, 안내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등이 강화된다.

공사 기간 중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진행된다. 기존 주차장 및 일반차량 진입의 어려움을 감안, 오는 6월 중 전주역 뒤편 잠재마을 철도 부지에 15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운영한다. 복합환승센터 조성 부지인 구) 농심부지는 올 연말까지 임시 승하차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주역 앞 동부대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동부대로의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 카메라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택시 승강장 진입 통제 및 꼬리물기 방지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덕진경찰서와 협조해 경찰 인력과 교통봉사자를

배치 운영한다.

기존 전주역을 종점으로 운행되던 79, 101번 시내버스는 7월 1일부터 동물원으로 종점이 변경돼 운행되며 전주역 내부로는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주역 개선사업은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450억(국비 300억, 철도공사 100억, 전주시 50억)이 투입돼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 증축 △주차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2025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은 "지난 1981년 신축 후 42년이 지난 전주역을 새롭게 바꾸는 이번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불편이 예상돼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전주역을 이용하시는 시민께서는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전주시, 6월 16일까지 공공기관·학교 등 대상 사업 참여 접수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로,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

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

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자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또는 전자우편(CHURIM11@korea.kr), 팩스(063-281-2618)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의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66개소, 3536면의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지원했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전주대 산학협력단,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협약 체결

전주시는 25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협약으로 전주대학교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확대 운영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문 영양사 등이 50인 이하 노인·장애인 시설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식단 제공, 조리사·요양보

호사·어르신에 대한 대상별 교육,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급식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6호 시민햇빛발전소가동

탄소중립 기여 위해 중인동 완산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 준공

전주시가 공공 유휴부지를 임대하고, 시민들이 건설한 6호 시민햇빛발전소가 본격적인 전기 생산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 유남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일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6호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전기 생산을 시작한 6호 시민햇빛발전소는 완산생활체육공원의 주차장 410㎡에 건립됐다.

하루 발전용량은 90kW 규모로, 연간 약 13만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가 한 달 평균 305kWh의 전력을 사용할 때 3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호 발전소 가동을 시작으로 6호 발전소까지의 전력 생산 규모는 총 582.3kW에 달한다.

연간 약 80만kWh의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342톤에 해당한다. 이는 전주시와 시민의 공동 탄소중립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전주시민 337명, 출자규모 6억2400만원으로, 올해 3월에는 설립 후 최대 배당률인 5.5% 배당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6호에 이은 7호 시민햇빛발전소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조합원으로 참여해 에너지 생산자가 되고자 하는 전주시민은 누구나 출자(1구와 당 10만원, 한도 300구와)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전화 063-905-4104)으로 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적극 추진

전주시는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환자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돌봄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 수 현황을 보면 1만264명(2021.12.31. 기준)으로 65세 인구 대비 10.24%를 차지한다. 이는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시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지역 주민 중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하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대기 중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소득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주간보호(인지지원등급 월 8일, 등급신청 대기자 월 20일), 방문요양(월 42시간)을 지원하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거나 노인맞춤돌봄 등 기타 유사한 국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서, 치매진단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혹은 처방전 등이 필요하며, 신청을 원하면 전화로 상담 후 전주시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281-630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